

우유수급 안정維持와 유제품 유통개선 方向

이 글은 한국식품 유통학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가공식품 유통의 종합적인 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중 허신행박사의 발표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註)

I. 낙농산업의 새로운 전환기

한국낙농산업은 우선 세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유및 유제품 수입의 개방압력과 국내 우유생산과잉 그리고 우유및 유제품의 가공산업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세가지 측면에서 낙농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은 셈이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농수산물수출국의 수입 개방압력에 대해 낙농인들은 구조개선을 통해 生産性을 향상시키고 유제품가격을 낮출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어떤 형태로든지 수급안정장치를 새로이 확립, 과잉분의 제거와 동시에 생산성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方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농가소득원의 확대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 유제품의 소비가 급증하자 낙농인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하여금 우유및 유제품의 가공산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케 할 수는 없을까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이러한 세가지 변화에 대두되기 시작한 이러한 세가지 변화에 적응하면서 한국낙농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

해 우리가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길은 시간을 벌면서 낙농산업을 고능력생산체제로 바꾸는 동시에 수급을 균형있게 안정시키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II. 국내외 우유수급사정과 전망

日本 국제식량농업협회에서 조사한 84년말현재 주요 37개국의 우유생산량 변동추이를 보면 이들 국가의 우유생산량이 81~84년사이에 2.3% 가까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우유소비가 포화상태에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생산과잉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때 중요한 현상이 아닐수 없다.

특히 주요국가 유제품 연말재고량을 보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

84년의 버터재고량이 1백87만톤, 치즈 1백40만톤, 탈지분유 2백20만톤 등으로 모두 5백47만톤에 이른다. 이쯤되면 우유의 과잉생산은 거의 세계적인 문제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가운데서도 EC의 유제품 재고량은 놀라운 수준에 도달하여 농정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필자가 이미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하나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유및 유제품의 생산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년이후부터는 계절적인 부족현상마저 없어지고 과잉생산의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추정은 81~85년까지의 월별치가 기준이 된것이므로 이 예측결과를 가지고 우유의 수급전망을 단정지을 수가 없다. 또 필자는 동일한 논문속에서 별도의 수급함수를 유도하고 이것을 기초로 2천1년까지의 우유및 유제품 수급을 예측해 보았다. 그 결과 분명하게 나타난 사실은 가격이나 인구및 소득등의 요인에 따라 수급사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유가격을 과거 추세대로 인상해나갈 경우 원유의 생산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유가격을 실질선에서 고정시킬 경우 생산공급이 오히려 수요보다 모자라서 생산부족 현상마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기초로 수급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Ⅲ. 需給균형 對案別 효과 測定

우유의 수급균형을 적정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시키려면 축산물과 같이 자율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낙농은 고도의 부패성을 가진 우유를 매일 생산해내는 산업으로 공공기관의 개입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과 분석의 틀이 있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수급균형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극대화

에 모아져야 한다. 우유수급을 균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대안에 대해서는 네가지로 나누어 그 효과를 측정코자 한다. 첫째 현행 행정가격제, 둘째 소위 계획생산이라고 부르는 생산활당제, 세째 자율시장제, 네째 가격차별정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한다. 이 네가지 정책대안의 사회복지적인 효과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우유및 유제품의 수요와 공급곡선을 유도해내야 된다.

그리고 수급에 따른 균형가격과 수량 모두 추정할 수 있어야 사회복지,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총粗수입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가격차별제가 다른 대안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다. 가격차별제란 용도에 따른 원유가격의 차별화, 즉 시유용원유에 대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유제품용 원유에 대해서는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때 유제품용 원유가 상대적으로 비싼 시유용원유로 둔갑할 수 있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집유선의 일원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유협동조합은 민간기업이 아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들 자체적으로 가격차별제를 도입할 수 있다.

Ⅳ. 유제품의 유통개선방향

85년말 농수산부에서 집계한 시유및 주요 유제품의 유통마진율 변동추이를 보면 아이스크림의 유통 마진율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으며 버터와 치즈 발효유와 조제분유의 순서로 유통마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것은 이들 마진율이

연도별로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마진은 소매단계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진율이 높으나 낮으나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경쟁구조아래서 형성된 것이냐에 모아진다.

상위 2~4개의 유가공업체가 유제품시장을 70~80% 점유하고 있는 소수과점 구조아래서 유통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우기 주요 생산자단체의 유제품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인 상태에서 농민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척하는 문제도 난맥상이다.

V.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의酪農產業은 세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기에 돌입,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주요農産物輸出國의 輸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어서 단기간내에 우리酪農人들은 構造改善을 통해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乳製品價格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유 및 乳製品의 輸入을 억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우유생산이 過剩狀態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需給安定裝置를 確立시키지 않으면酪農產業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牛乳生産過剩은 지금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서둘러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소값과동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셋째, 農家 所得源의 확대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 乳製品의 消費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附加價値가 높은 牛乳加工產業이 새로운 所得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우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우리 국민이 乳製品과 같은 식품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까지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우유 및 乳製品의 加工產業에 生産者團體의 참여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주요 生産者團體의 乳製品 市場占有率이 50% 미만인 상태에서 농민의 새로운 所得源을 개척하는 問題도 난맥상이다. 따라서 乳製品市場을 競爭의인 구조로 근대화시키는 동시에 농업비즈니스를 농민의 새로운 所得源화 한다는 거시적인 정책의지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당분간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능력우는 과감하게 도태하여

낙농경영 개선하자.